

지구촌 양계뉴스

미국

中 닭고기 반덤핑 관세 WTO 제소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20일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는 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한 약속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이 WTO에 중국을 제소함에 따라 양국은 최소 2개월간 분쟁 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되며 타결에 실패하면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WTO에 판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산 닭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국산 닭고기 업체들이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내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워싱턴=연합뉴스

● ● ● 오바마 미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월 3일(현지 시간)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절차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며 의회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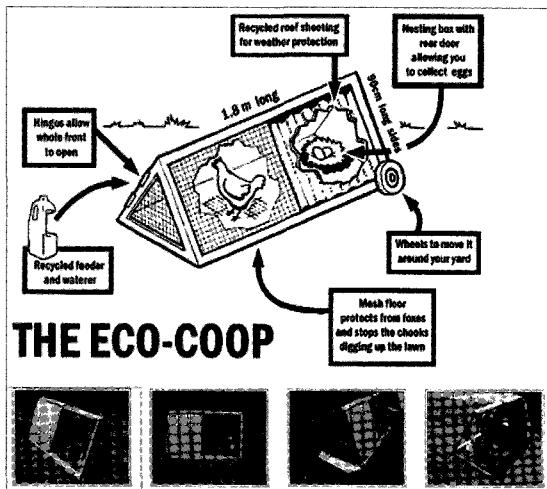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처리 행보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한경닷컴



••• 호주

도심 속에서 암탉 키우기 봄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전원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도시인들의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도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의 터전이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옥상이나 베란다에 채소를 가꾸면서 위안을 삼기도 한다. 내가 가기가 힘들다면 거꾸로 전원을 도시로 끌고 오면 되지 않는가.

호주 시드니 웨스트 라이드에 있는 '렌터추크' (www.rentachook.com.au)는 도시로 전원생활 끌고 오기 트렌드의 최신판이라고 할 만하다. 이 사업은 시드니 근교에 살고 있던 데이비드 잉그햄(David Ingham)이라는 사람이 2001년에 시작했다.

사업내용은 간단하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걀을 낳는 암탉과 닭장과 빌려주고 닭사료와 닭을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닭장 대여후 판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주 동안 빌려서 사용해보고 계속하고 싶으면 그때 구매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닭장 가격은 380호주달러이다. 6주 동안의 임대비용은 100호주달러다.

닭장은 달걀을 낳는 곳, 횟대, 물통 등이 장치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이다. 크기는 가로 1.8m, 세로 0.9m이다.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옥상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다.

렌터추크는 1년에 400개 정도의 닭장을 팔고 있다. 새로운 고객의 50%는 암탉키우기 재미에 끌 빠진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 텃밭가꾸기를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암탉은 애완동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달걀까지 낳아 준다. 자녀들과 함께 닭에게 모이와 물을 주며 잠시나마 농촌생활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 창업닷컴

••• 덴마크

세계 첫 '비만세' 도입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다.

영국 BBC방송은 덴마크 정부가 10월 1일부터 2.3% 이상의 포화지방을 함유한 제품에 기존 세금 외에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3400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비만세는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 등 포화지방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새 정책 시행 1주일 전부터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다. BBC는 “덴마크 소비자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비만세를 ‘관료주의가 빚은 악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산업연맹(DI)은 “이번 조치가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세금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과학자들은 “포화지방보다 소금이나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 건강에 더 해롭다”며 “정부가 표적을 잘못 정했다”고 비판했다.

비만세를 도입한 우파 정부가 지난달 총선에서 패배하고 좌파정부로 교체됐기 때문에 이 세금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 한경닷컴

●● 일본

사료비축예산 2배 증액

지난 9월 20일 농림수산성은 2012년도 사

료곡물비축예산을 2011년도 예산의 2배인 40만 톤 분량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비축 예산액은 2011년도 지교시와케(사업정리·공개예산심사제도)에 따라 요구금액의 절반 수준인 20만 톤 분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으로 항만시설이 피해를 입어 사료공급이 어려워졌을 때 비축에서 35만 톤을 방출해 많은 축산농가가 사료부족 난이 발생하지 않아 사료곡물비축예산을 2배 증액을 요구했다.

사료곡물인 옥수수와 수수의 비축은 2002년도까지는 80만 톤이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1년도는 40만 톤이 있지만, 지교시와케 결과를 반영한 2011년도 예산에 따라 비축분량은 20만 톤이다. 남은 비축량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보관경비에 쓰고 있으며, 매각이익이 줄면 20만 톤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이다.

2012년도에 개산요구대로 40만 톤 분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적어도 1년간은 동일본대지진 때와 같은 사료부족사태에 대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낙농단체 등은 옥수수와 수수의 비축량을 60만 톤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경우를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본농업신문